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음 11월 10일) 제170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도는 7일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영국 자동차인증국 한국지사와 자동차부품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영국 교통부 공인시험기관 지정

자동차부품 유럽진출 '고삐'

도, VCA 한국지사와 업무협약 체결 공인시험기관 현판 수여식도 진행

전북도 산하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영국 교통부 차량인증국(VCA·Vehicle Certification Agency)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7일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영국 자동차인증국 한국지사와 자동차부품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VCA 한국지사로부터 자동차융합기술원을 VCA 공인시험기관 현판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영국 VCA의 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지원에 공신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 9월 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킨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전북 자동차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지자체·산업계·연구기관 간 협업생태계 구축, 지능형·친환경 분야 기술선도 및 시장진입, 도내 부품수급을 제고, 자동차 부품 및 특장차 수출시장 개척 등의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지능형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응할 핵심시설로 대형상용차용 10m 전자파 쉘터 기동과 함께 관련 장비들을 소개하고, VCA 공인시험기관 지정뿐 아니라 KOLAS 인증

취득 등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을 준비해 왔다.

이번 영국 VCA 공인시험기관 지정으로 전자파 쉘터를 활용한 시험분야는 승용차 및 부품 전자파 내성, 승용차 및 부품 전자파 방사 노이즈, 자율주행차 및 관련 부품의 전자적합성 평가다.

최근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인증 제도는 기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융합기술로 인해 인증시장이라는 신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융합기술 적용에 따른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때문에, 세계 시험·인증시장 규모는 2014년 167조원에서 2020년 240조원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시장규모도 9.5조원에서 14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올해 해외 인증과 관련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행시험장과 각종 시험 시설을 중심으로 인증관련 기업 유치와 인재육성 및 전문가를 양성해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품이나 차량의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소극적 인증에서 해외 시장으로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인증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며, 자동차 산업이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시험을 우리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해 준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VCA 공인시험기관 지정으로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수출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향후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VCA 한국지사와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이번 VCA 자동차 인증 시험기관 지정으로 유럽에 자동차와 부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형식승인(ECE Regulation No. 10)을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국제공인시험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배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이번 VCA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비롯해 '자동차 전장품분야 전자기내성 및 전자기적합성'에 관한 KOLAS 인증 신규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동차 튜닝부품 시험기관 지정 및 자동차부품 인증시험 등 5개 분야에서 KOLAS(한국인증기구)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관려기사 4면·5면>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원점 재검토"

이미숙 의원 "현실성 없는 사업에 예산 1000억원대로 늘어"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숙 의원(효자3·4동·사진)은 7일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출발점은 컨벤션센터 건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민선 6기 들어 돌연 전북도와 합의도 없이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 사업 추진 자체가 수포로 돌아갔다"며 전주시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중심에 있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사업도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전주시의 무능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단초는 지난 2004년 당시 김원주 전주시장이 강현욱 도지사에게 컨벤션센터·호텔 건립

을 위한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및 활용계획'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계획은 지상 3층에 지하 2층의 컨벤션, 지상 7층과 지하 2층의 호텔 및 상업시설을 짓는 데 600억원, 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 체육 시설을 조성하는 데 1315억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당시 전주시는 막대한 재원 19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컨벤션은 재정사업으로, 호텔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과 대체시설은 민자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0년 4월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양여하고 대체시설과 전시·컨벤션을 기부받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

민간자본과의 기부대 양여방식을 토대로 당시 송하진 시장은 2012년 4월 민자 공모를 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 전주시는 같은해 12월 31일 롯데쇼핑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송하진 전주시장이 도지사로, 김승수 전북도 정부부처지사가 전주시장이 되면서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도 어그러졌다"며 "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이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기존 민자 유

치에서 전체 재정사업으로 변경, 1202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전주시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전북도와 갈등만 증폭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김승수 시장이 전주시와 전북도 사이에 이뤄진 약속을 뒤집고 기약이나 열악한 재정형편에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재정사업 방식을 변경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2015년 7월 시의회에 제출한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 사업비는 700억원 이었으나,행자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올린 사업비는 700억원이 아닌 1002억원으로 올린 이유는 무엇이고 사업비 논란이 없도록 정확한 사업비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와 전북도의 기관 약속은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며 "전주시는 도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데는 "행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시 사업비 1002억원은투자심사 전 사전절차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한경계성분석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와 제시된 금액으로 이미 매입된 시유지와 철거비용, 예비비가 모두 포함된 총사업비"라고 답했다. /김영재 기자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적극 보장을"

박형배 의원 "시민 의사 표현, 불법현수막으로 철거 안돼"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배 의원(효자3·4동·사진)은 7일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주말 전국 232만개의 촛불은 3차 팔기에 나선 청와대와 정치권을 향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개인의 영업행위를 위해 내건 현수막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수 시장은 "시민들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수막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영재 기자

▶ 매일 INDEX

2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개소

3면 김기춘, 끝까지 '모르쇠' 로버티기

4면 "한국전통문화전당, 감독 철저히"

순창이 참 좋다

순창군 귀농·귀촌 상담전화
063)650-5172~5174

순창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www.gosunchang.com

순창군 GOSUNCHANG

귀농·귀촌 최적지 순창
순창이 참 좋다!
순창 귀농은 더 좋다!